

현황분석자료

거꾸로 가는 文정부 경제정책

2018. 6. 22

 재단법인
이리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순서

1. 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경제(거시경제 동향).....	1
2. 거꾸로 가는 文정부 경제정책.....	3
〔逆주행 1〕 최저임금 인상 ⇨ 양극화 악화.....	4
〔逆주행 2〕 법인세 인상 ⇨ 글로벌경쟁력 약화.....	5
〔逆주행 3〕 세금 퍼붓기, 퍼주기 재정 ⇨ 재정건전성 악화.....	5
〔逆주행 4〕 부동산 대책 ⇨ 서민경제 파탄.....	7
3. 아마추어 3류 경제정책 정부.....	9
〔아삼류 1〕 일자리창출 정부? ⇨ 맞춤형 실업자 양산 정부!.....	9
〔아삼류 2〕 정체불명 脫원전 ⇨ 전기요금 폭탄.....	10
〔아삼류 3〕 재정만능주의 중독 정부.....	10
〔아삼류 4〕 성과 조급증 정부(현대차 구조개편 중단 참사).....	11
〔아삼류 5〕 우왕좌왕 정부(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12
4. 파란불을 켜기 위한 시급한 처방.....	13

1. 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경제 (거시경제 동향)

□ 경기순환지표, 2018년 초 이미 침체국면에 진입

○ 2018년 5월 발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를 판단하는 10대 경기지표 중 9개가 둔화 내지 하강하고 있다.

- 소매판매액지수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입액, 소비자자기대지수가 둔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취업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하강 국면이다.
- 최근 6개월간의 움직임을 보면, 지표들이 회복·둔화국면에서 점차 둔화·하강국면으로 분포하는 모습이다.

□ 성장률 추이는 2016년 3분기 이후 지속적 침체국면 기조

○ 실질 GDP증가율은 2017년 3/4분기를 예외로 하면, 2016년 3/4분기 이래 현재까지 침체국면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제조업 장기불황에 양질의 일자리까지 감소

○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제조업 근로자가 2013년 말 64.9만 명에서 지난해 말 62.9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했다.

- 타 업종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 편인 30대 그룹 제조업 종사자가 줄었다는 고용시장에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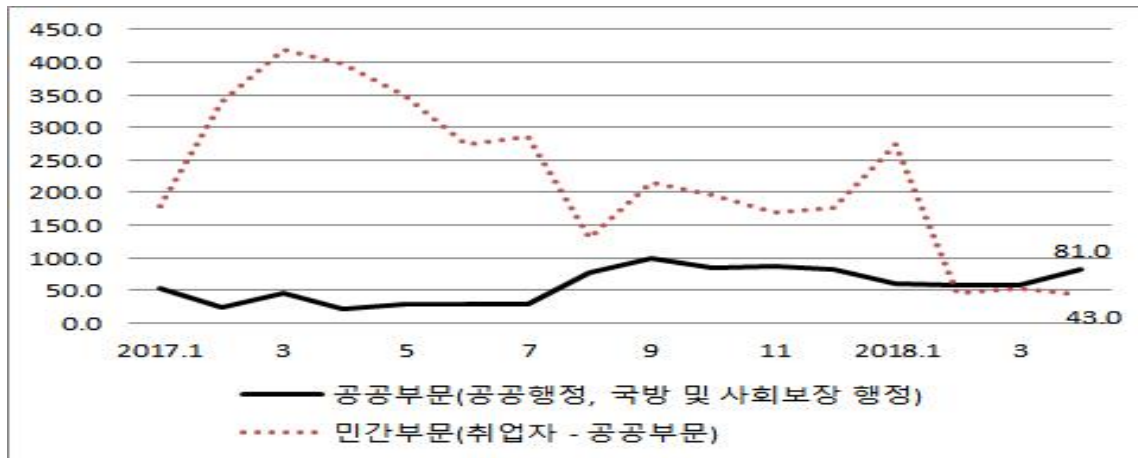
□ 민간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증가한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 文정부 공무원 17.4만 명 증원 공약 이행이 진행되면서 올 2월 이후 민

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증가했다.

- (공공, 민간) : 1월(61, 274) 2월(59, 45) 3월(57,54) 4월(80,43) 단위: 천명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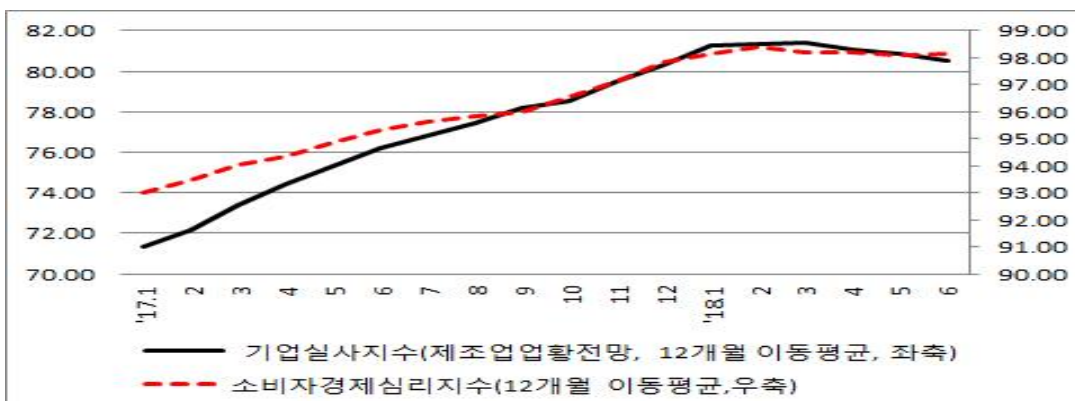


□ 2018년 들어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들이 동반 하락 추세

- 기업경기실사지수(12월 이동평균)는 2018년 3월(81.4), 경제심리지수(12월 이동평균)는 2018년 2월(98.4)를 고점으로 하락했다.

- 이는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실사지수와 소비자 경제심리지수



2. 거꾸로 가는 文정부 경제정책

- 文정부가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세칭 ‘J노믹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수준에 불과한 左派이론을 일국의 경제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무모하고도 위험한 初有의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파탄직전이다.
 - 실업률은 17년 내 최악이고, 거시지표들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되었으며, 나라 곳간은 위태로워졌다. 그나마 기대했던 ‘혁신성장’ 과제들은 말뿐이고 허송세월이 되고 있다.
- 文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애초부터 잘못된 경제정책을 마치 金科玉條인양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서 읽을 수 있는 ‘최악의 양극화 수준’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의 입을 빌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이다”,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라고 했지만, 며칠이 못가 ‘조작’ 수준의 我田引水식 통계자료 재가공·해석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좌파정부가, 통계상으로 드러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작 전체가구의 41.38%를 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를 통계해석에서조차 배제시킨 놀라운 일을 目睹했다.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大韓民國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 文정부의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국가적 재앙이다.
 - 무차별적 예산 퍼붓기는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세들에게 빚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
 - 반기업정서에 기반한 ‘기업 옥죄기’로 기업이 탈출하고 나면 중남미가 겪었던 끔직한 빈곤과 경제적 피해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逆주행 1]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 ‘최저임금 인상’ 이 오히려 소득악화, 소득양극화 확대에 일조

- 文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이 통계청 발표 자료로 再확인된다.
- 가구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 반면 최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3% 증가했다. 가계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로 1년 전 5.35보다 높아져 양극화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자료: 파이낸셜뉴스(2018.6.3.)

- 저임금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근로자外 가구 비중이 41.38%로 2008년 1분기 42.11%이후 10년만에 최대치로 증가했고, 2017년 4분기 대비 4% 포인트나 급증했다.

[逆주행 2] 文정부 법인세 인상, 글로벌 감세추세에 정면 역행

- 文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p 높이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9년 만에 반전시켰다.
-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조세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 美 트럼프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21%로 인하했으며, 일본도 2016년에 23.4%로 인하했고 올해에도 실질세율 부담을 최대 2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22%까지 인하했다.
 - 이에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85년에 47.5%이었으나 2017년말 현재 24%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OECD 법인세율 인하 추세

(단위: %)

	1985	1995	2005	2015	2017
최고	61.8 (핀란드)	55.1 (독일)	39.5 (일본)	39.0 (미국)	38.9 (미국)
최저	31.9 (스위스)	18.0 (헝가리)	12.5 (아일랜드)	12.5 (아일랜드)	9.0 (헝가리)
평균	47.5	35.7	28.3	25.2	24.0
표준편차	8.0	8.0	7.0	6.0	5.5

주: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Statistics

[逆주행 3] 재정건전성 악화 무시, 국가부채를 더 늘리려 시도

- 복지확대,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 공무원 17.4만명 증원에만 30년간 328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이며, 文정부 1년간 추경도 2차례나 편성했다. 2017년 국가채무는 총당부채 고려 시 GDP대비 90%에 육박했다. 세금 퍼붓기는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가적

재앙이 될 공산이 크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요재정 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소요예산
아동수당도입(만0~5세)	-	월10만원(235만명)	연평균 2조 6,723억원
기초연금 인상	월20.6만원	25만원 (9조 1,229억원)	1조 268억원('18년 9월 증액시행 시) 연평균 3조 1,976억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9,238억원	1조 929억	1,740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22만원(43.7만명)	27만원(51.4만명)	
자활사업 확대		93.6만원(4.5만명)	101.9만원(4.65만명)
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	
참전·무공수당 인상		(참전)22만원, 무공(30만원)	참전 30만원, 무공(38만원)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 확대		-	33.5~46.8만원(526억원)
주택 매입후 재임대 도입		-	최대 1천호 매입(0.1조원)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	345억원 신규
치매요양시설 확충		치매암센터(188억원)	치매암센터(2,135억원) 치매요양시설 확충(977억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9.5만명, 54만명	10.2만명, 60만명
최저임금 인상재정지원		-	1인당 최대 13만원(3조원)
1인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3억원
소상공인 상생자금 도입		-	2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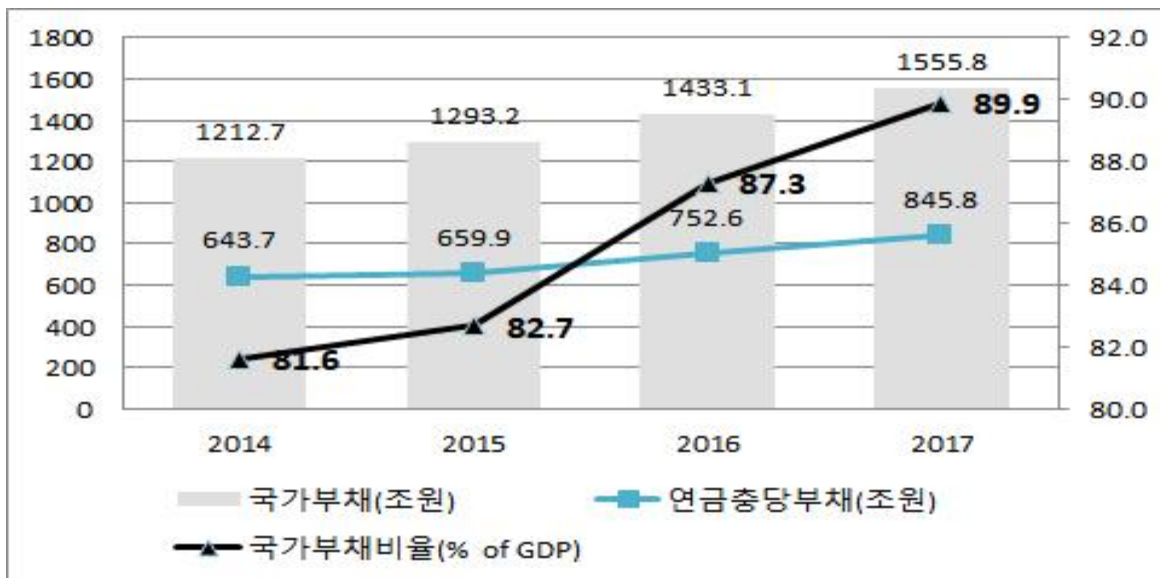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재정동향 & 이슈 2017년 가을호」를 이용하여 재작성

- 201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약 661조원(GDP 대비 비율 38.6%)으로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쳐 양호한 편이라며 국가채무비율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31일 청와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숨은 빚'인 잠재부채는 무시한 것이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2017년 약 1556조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정부 발표)
-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포르투갈, 벨기에에 이어 5위로 높은 수준이다.(출처:OECD)

한국의 연금총당부채와 국가부채 비율



[역주행 4] 부동산 안정화 정책? 서민경제 파탄

○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수요억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2107 6·19 부동산 대책: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하향
- 2017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

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

- 2017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도금 대출 및 보증한도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 신DTI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
-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4월1일 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

○ 하지만 가격폭등, 지역 간 격차 확대, 주택의 질적 저하 그리고 서민경제의 파탄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간 공급 부족의 결과는 가격 폭등. 주택 수요는 기본적으로 늘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돼 있다가 시장 상황이 회복되는 조짐이 생기면 갑자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급부족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들은 지방 소재 주택을 포기하고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강남 등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주택공급 중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대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부족 불가피해져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을 상승시키게 된다.

○ 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 가능성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 치중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 가장 큰 문제는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주택금융 규제는 특정 투기자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경착륙되면서 서민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3. 아마추어 3류 경제정책 정부

[아삼류 1] 일자리창출 정부? ⇨ 맞춤형 실업자 양산 정부!

- 文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자리 추경, 청년일자리 추경 등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 하지만, 통계청 발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으로 1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실을 반영한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무려 11.5%라고 발표했다.
 -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5%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무려 23.3%로 악화되었다.
- ‘소득주도성장’에 바탕을 둔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가 출범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고용쇼크’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의 전적인 신규창출로 보기도 어려우며, 막대한 확대재정을 수반하는 국가적 부담으로 귀결된다.
- 文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근로자·서민·청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아스류 2] 정체불명 脫원전 에너지정책, 전기요금 폭탄이 눈앞!

- 중차대한 국가大事를 정부가 아닌 여론재판에 맡기며 정부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탈원전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국민혈세로 충당하려하나 중국에는 전기료 폭등이 불가피하다.
 - 文정부는 정작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脫원전’이라는 급진적 에너지정책을 오로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
 -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위험성과 전기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피할 수가 없다. 독일의 경우 원전폐기 추진 이후 전기요금이 40% 이상 폭등했다.
 - 탈원전 비용을 초기에는 국민혈세로 충당하거나 기업에 부담지울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全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입법조사처는 “건설 중단시 매년 2600억원씩 15년간 3조9,4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연인원 720만명의 일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스류 3] 일자리 안정자금, 2차례 추경 등 재정만능주의에 중독

- 文정부는,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재정을 통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 또한 지난해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11조원의 추경을 편성·집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을 또 편성했다.

- 이처럼 경기조절과 일자리 창출을 재정지출과 국가부채에 의존하면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자생력을 약화시켜 정부지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된다.
 - IMF는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 OECD도 5월 30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스류 4] 현대차 구조개편 중단 참사를 빚어낸 성과 조급증

- 시장 논리를 무시한 ‘文정부 재벌개혁’의 성과 조급증이 만들어 낸 참사이다.

현대차 구조 개편안 일지

일자	주요내용
3월 28일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해소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노력 긍정적” 평가
4월 4일	엘리엇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10억달러 규모의 현대차 그룹 보통주 보유 중”
23일	엘리엇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 가속화 제안” 발표
26일	김상조 위원장, “엘리엇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발언
27일	현대차그룹, 1조원 상당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5월 2일	현대모비스, 60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11일	정의선 부회장, “엘리엇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선언
15일	ISS,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권고
16일	현대차, 세계 최대 의결권사 ISS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
17일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21일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 주주 총회 일정(29일 예정) 취소 발표

- 그동안 정부는 ‘재벌 개혁’ 을 외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압박했다.
- 현대차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은 물론 다른 방법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 그런데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 시점을 ‘주주총회前’ 으로 특정하면서 기업에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간마저 압박했다.
- 정부의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과 이런 약점을 노린 투기자본에 의해 현대차의 장기 발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다.

[아스류 5] 우왕좌왕의 극치를 보여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 부처 조율도 없이 덜렁 정책을 발표하고 항의가 나오면 뒤늦은 수습을 시도했다.
 -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부 조율도 거쳤다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발표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지에 동의하며 정부부처 간 조율을 거쳤다고 확인했다.
 - 지난 해 12월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온 지 보름 만에 정반대의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은 대혼란. 청와대에 폐지반대 청원이 쇄도했다.
 -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 주무부서 장관들의 발표를 여론에 밀려 청와대가 번복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 아직도 시민단체 등의 눈치만 살피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 못하고 있다.

4. 파란불을 켜기 위한 시급한 처방

□ 正道가 답이다. ‘本末顛倒’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 생산성이 ‘本’ 이고 소득증가는 ‘末’ 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민간요법 수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正道의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라

- 한계기업들을 조속히 구조조정하고 고용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첨단 신산업 육성 등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퍼주기식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도 다이어트하라

- 그래야 민간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인적·물적 자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민간부문으로 흘러갈 것이다.
- 공무원 증원보다 공공부문 비효율성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非효율적인 부분을 먼저 없애야 공무원 증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부문으로의 취업 쏠림도 막을 수 있다.
-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차별적 예산 퍼붓기는 우리 후세들에게 ‘빚’만 떠넘기게 된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가 살아있는 증거이다.

□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라

-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일 수 없다. 기업이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기술과 인력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지금처럼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을 강요하고, 고용시장의 경직화를 가속하며 적대적인 기업정책을 지속한다면, 기업에게 남은 선택은 ‘脫한국’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재앙 수준의 끔직한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 02-6288-0531
김창배 연구위원 ☎ 02-6288-0534